

한중일 기후변화-에너지운동의 연대를 위하여

2010. 11.

에너지정의행동(Energy Justice Actions)
이헌석(李憲錫, LEE Heonseok)



목차

I

동아시아 기후변화에너지운동의 연대의 필요성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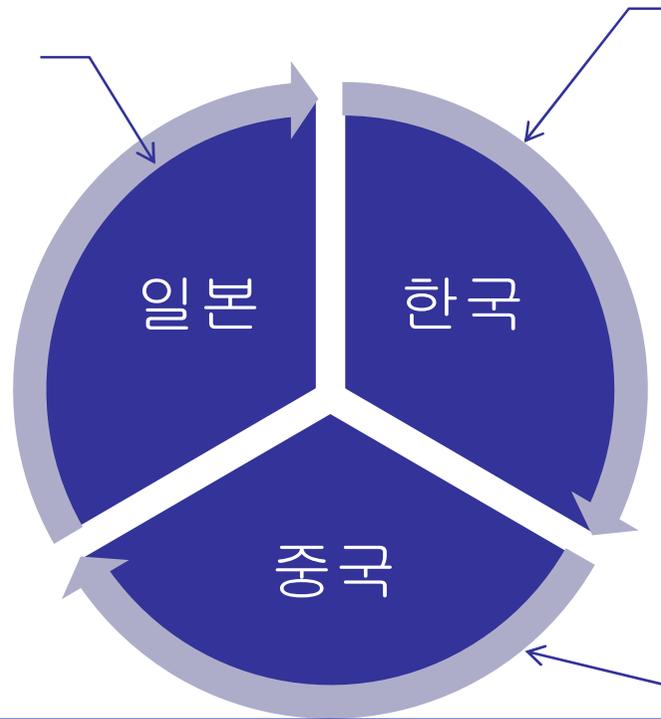
한국의 기후변화-에너지운동 연대

III

앞으로의 과제

한국-일본-중국의 기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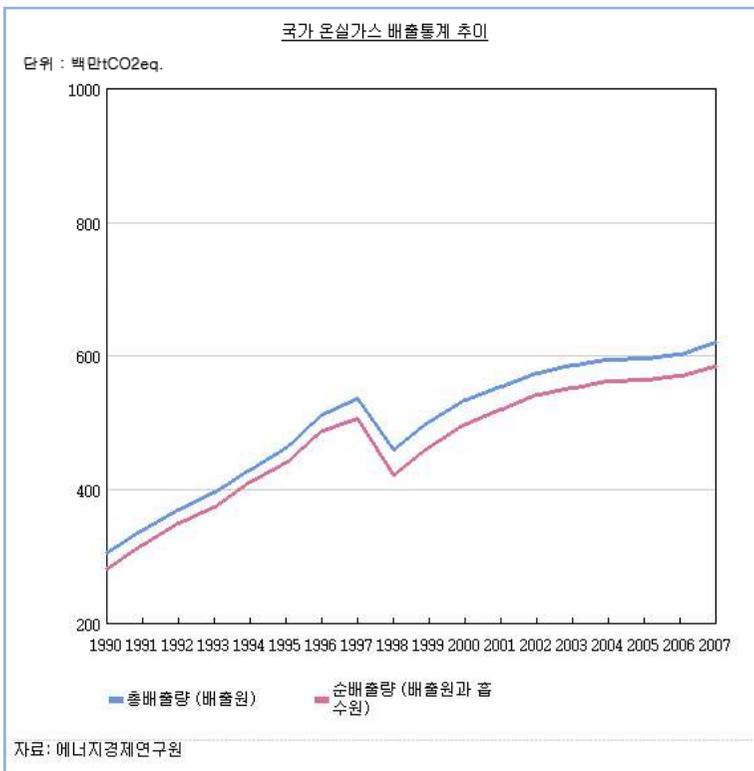
-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룸
- 향후 다른 나라에게 겪을 문제들을 먼저 겪어 왔음.(도시화, 산업화 문제 등)
- 공해/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장 먼저 시작
- 현재 3국 중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인 시민사회 활동이 벌어지고 있음.



- 후발 산업국으로 정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(架橋)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.
- 3국중 가장 작은 인구와 경제규모로 인해 많은 실험이 가능
- 1990년대 이후에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.
- 시민사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나, 역동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음.
- 지리적으로 3국의 중간에 위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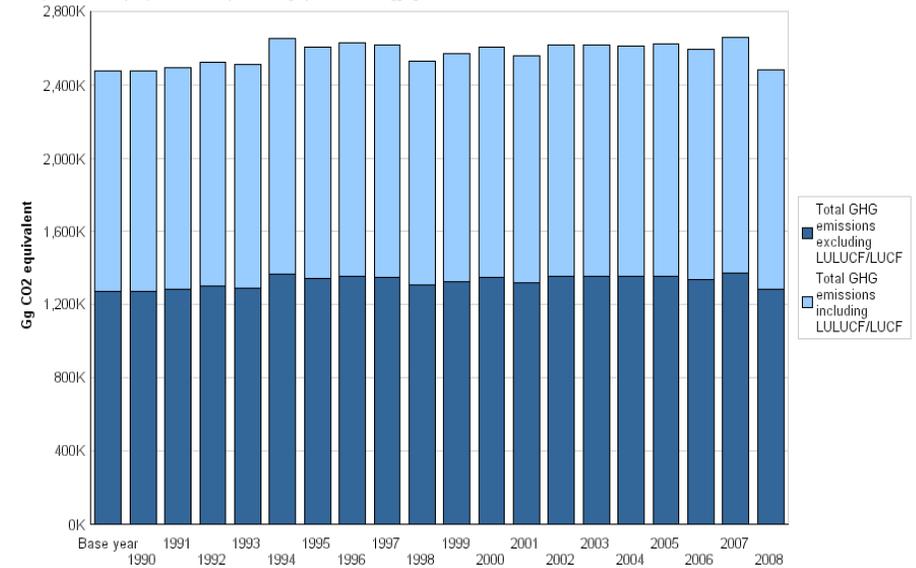
- 가장 뒤늦게 산업국가 대열에 뛰어 들었으나,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. 매우 많은 인구와 큰 경제 규모.
- 공해/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장 늦게 시작되었으나, ‘세계의 공장’ 역할을 맡고 있음에 따라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음.
- 시민사회활동이 뒤늦게 시작.

한국과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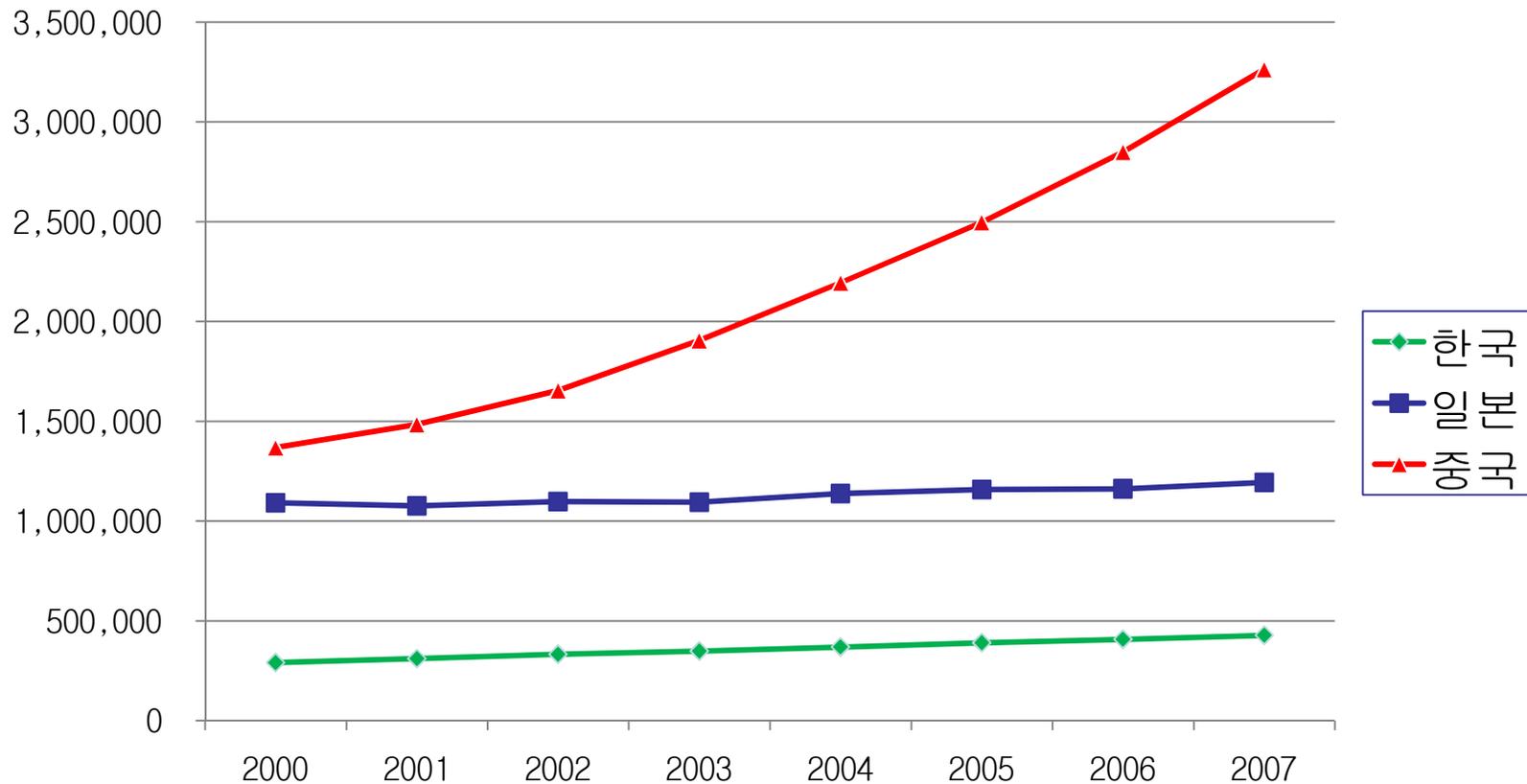
Annual greenhouse gas (GHG) emissions for Japan

Query results for Party: Japan - Years: All years - Category: Totals - Gas: Aggregate GHG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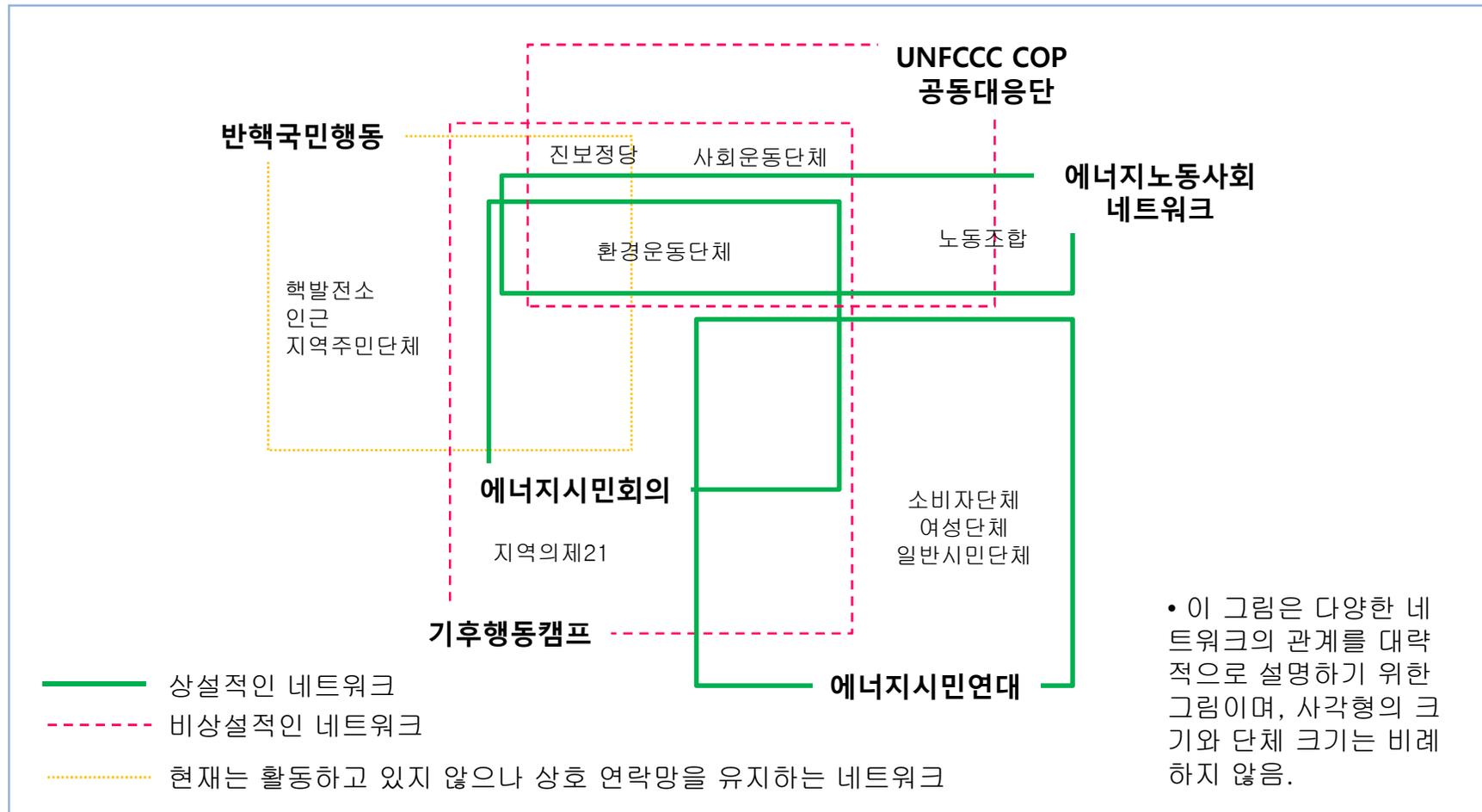
Source: UNFCCC Data Interface, Thursday, 11 November 2010 23:18:30 CET

3국의 전력소비증가 (단위 : GWh)



출처 : JEPIC, 해외전기사업통계

기후변화-에너지 운동관련 한국의 네트워크 구성





에너지시민회의

-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대응을 위한 국가에너지시민포럼을 기반으로 2008년 7월 창립.
- 기후변화,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18개 단체가 함께 활동.
- 공동집행위원장 및 간사단체,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.
- 사안이 있을 때마다 참가단체 외의 단체와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연대의 범위를 넓혀 함께 활동을 진행함.
- 매달 열리는 정기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안 문제에 대응.
-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, 2009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 등 활동 전개.



에너지시민연대

- 2000년 창립.
- 정부(지식경제부)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.
- 전국 252개 환경, 소비자, 여성,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절약운동 연대기구
- 서울 중심의 단체뿐만 아니라, 지역조직까지 모두 포함된 형태의 연대 조직.
- 에너지절약운동을 기본으로 에너지낭비 실태조사, 에너지기본법 제정운동,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및 관련 정책활동을 펼침.
- 매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행사를 진행.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enet.or.kr/>



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

- 2001년 전력산업민영화에 반대하는 발전노동조합 파업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운동을 계기로 2005년 창립.
- 발전, 원자력, 가스, 에너지관련 노동조합과 환경단체, 사회단체, 진보정당 등 15개 단체가 가입.
- 전력 및 가스 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, 재생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 등을 목표로 활동
- 또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활동가 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진행.
- 홈페이지 : <http://energynetwork.jinbo.net>



한국기후행동캠프

- 2009년 에너지기후활동가 모임을 계기로 2009,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캠프를 진행. 상시적인 연대체는 아니며, 캠프 실무를 위해 단체들이 캠프 조직위원회를 결성. 행사가 끝난 이후 해산.
- ‘기후변화-에너지 활동가들과 시민의 1박 2일’ 이라는 컨셉으로 기후 변화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.
- 2010년 기후행동캠프의 경우, 에너지시민회의를 비롯한 환경단체, 사회 운동단체, 지역의제21, 진보정당 등이 함께 공동 주최하여 전국에서 150여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참여함.
- 올해는 기후변화와 채식 / 그린캠퍼스 만들기 / 녹색마을만들기 / 탄소 거래의 문제점 / 스마트그리드 비판적 검토 / 기후변화 거버넌스(協治) / 기후변화 교육 / 기후변화와 핵발전 / 기후변화의 시민운동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됨.



UNFCCC COP 공동대응단

-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UNFCCC COP13 이후 12월초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가와 공동대응을 위한 대응단을 구성해 왔음.
- UNFCCC COP 공동대응단은 상시적인 연대체는 아니며,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준비하기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연대기구임.
- 기후변화협약 회의 이전 공동대응단 입장정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성명서 발표, 국제공동행동에 맞춰 국내와 회의장 집회 준비, 참여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을 진행함.
- 2009년의 경우, 에너지시민회의를 비롯한 환경단체, 사회운동단체, 노동조합, 농민단체, 민주노총과 한국노총, 진보정당 등이 참여함.
- 올해에도 UNFCCC COP16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단이 조만간 제안되어 구성될 예정임.(G20 대응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조금 늦어지고 있음.)



반핵국민행동

- 2002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반핵운동 연대체
- 환경단체, 종교단체, 시민단체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단체 등 44개 단체로 구성.
-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, 2005년 핵폐기장 주민투표 반대운동 등을 진행했으며, 2006년 이후에는 정보교환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형태로 존재.
- 2006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반대운동이나, 최근 경주방폐장 지질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, 해당지역의 단체 혹은 인근지역단체들이 함께 활동을 벌이기도 함.
- 실질적인 의결구조나 집행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나, 상호 연락체계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사안이 있을 때에는 다시 연대체를 재구성할 수 있음.



한국 기후변화-에너지 운동 연대체의 특징

- 반핵운동을 중심으로 환경단체들의 고유한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던 활동이 2000년대 들어 에너지절약,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기본권, 기후정의(Climate Justice)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.
- 특히 노동조합과 진보정당, 지역의제21와의 적극적인 교류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기후변화-에너지운동의 접촉 범위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음.
- 에너지시민회의, 에너지시민연대 등 상시적인 연대체가 구성되어 있으나, 각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고, 의제가 다양함에 따라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연대체를 계속 만들어옴.



한국 기후변화-에너지 운동 연대체의 과제 I

- 지금까지 연대체가 서울(혹은 각 단체의 중앙)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음.
 - 에너지시민연대와 지역의제21 등 지역조직까지 연대조직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기후변화-에너지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.
 - 지역 상황에 맞는 운동의제의 발굴과 확대 방안 필요 : 농촌지역 / 도-농 복합지역 / 대도시 지역 등
 - 더욱 다양한 대중들을 만나기 위한 교육사업의 필요성.
- 시민운동-사회운동 전체로 기후변화-에너지운동을 확대시켜 나가야할 필요성.
 - ‘기후변화문제=환경단체의 이슈’ 라는 등식은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 중.
 - 농민, 여성, 학생(미래세대), 빈민, 지역풀뿌리 운동, 노동조합 등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운동진영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시민운동-사회운동 전체로 운동을 확대시켜 나가야할 필요성.



한국 기후변화-에너지 운동 연대체의 과제 II

- 기후변화-에너지운동을 더욱 대중화 시켜야 할 필요성
 - 아직까지도 기후변화-에너지운동은 ‘전문가’와 ‘관료’간의 토론을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.
 - 이에 기후변화 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저변을 확대시키고, 농민, (기후변화로 인한)이주민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토론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.
 - 이를 통해 기후변화운동이 전문가 중심의 운동에서 ‘대중운동’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임.
- 에너지기본권, 기후정의 등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심화해야 할 필요성.
 - 기후변화문제를 에너지절약과 시민계몽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빈민들의 에너지기본권, 제3세계 원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성
 -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자원개발 및 REDD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와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.



한일 반핵운동의 연계

- 한국과 일본 반핵운동은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운동때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음.
- 이후 이러한 연계는 반핵아시아포럼(No Nukes Asia Forum)과 원자력자료정보실을 통해 계속 이어져오고 있으며, 매년 반핵아시아포럼 참가 및 한국 반핵운동에 지지를 보내왔음.
-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이들 단체 이외에도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와 교류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음.
- 1994년과 2001년 반핵아시아포럼 한국개최, 2003년 부안핵폐기장 지원, 2006년 한일반핵포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, 매년 히로시마(혹은 나가사키) 방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.
- 올해의 경우, 한국의 환경단체, 평화운동단체, 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‘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’을 열고 핵발전소 수출과 핵무기 확산,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문제를 함께 토론함.



기후변화운동의 국제연대

- UNFCCC COP 공동대응단 차원의 공식적인 국제연대운동은 없었으며, 개별단체를 중심으로 CJN(Climate Justice Network)과의 연대활동이 있었음.
- 이외에 기후변화-에너지운동을 중심으로 FOEI(지구의벗 인터네셔널) 등 개별 단체별 연대활동이나, 초청은 수차례 있었으나 다양한 한국내 단체들과 외국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많지 않았음.
- 이에 따라 개별적인 인사(혹은 단체)의 초청은 끊임없이 이어졌으나, 연대체 차원의 성과축적, 향후 계획 수립 등은 거의 없었음.



한중일 기후변화-에너지운동 연대를 위하여 I

- 한국-중국-일본 아시아 3국은 지리적 인접성 이외에도 서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음.
- 특히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,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, 이로 인한 기후변화-에너지문제의 심화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됨.
- 반핵운동을 중심으로 일본과 20여년 동안 다양한 연대운동, 인적교류가 있었음. 그러나 기후변화운동의 경우 개별단체의 활동 수준이었으며 본격적인 연대운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기본적인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.



한중일 기후변화-에너지운동 연대를 위하여 II

- 특히 한국의 경우, 그간 주요 연대활동이 유럽과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, 일본의 기후변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, 향후 연대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“정보 교류”와 “상호 이해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.
- 이의 극복을 위해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정보네트워크 <http://www.enviroasia.info> 등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.
- 그러나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위해서는 단순히 ‘뉴스’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, ‘인적 교류’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.
- 이를 위해 현재 기후변화-에너지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활동가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.



한중일 기후변화-에너지운동 연대를 위하여 III

- 또한 향후 서울 개최가 예상되는 2012년 기후변화협약 총회 등에 대비해 각국 별로 다양한 기후변화-에너지 활동가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.
- 이를 위해 2011년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하며, 1~2가지의 공동사업 진행을 통해 실천적인 활동을 진행했으면 한다.
- 여기에는 △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/중국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△ 태풍 등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정보 공유 및 대응 촉구 △ 한중일 기후변화 공동행동의 날 등이 가능 할 것이며, 이는 토론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.



감사합니다.

<기타 참고자료>

에너지정의행동 자료실

<http://energyjustice.kr>

개인 블로그

<http://greenreds.pe.kr>

<트위터>

@EnergyJustice

@GreenNReds

<이메일>

EJA@EnergyJustice.kr